

한국인의 이념적 성향과 민주주의 인식*

지병근**

◆ 요약 ◆

이 논문은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의 2010년 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자유와 평등을 포함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요소들과 더불어 경제발전 및 정부구성방식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이념이 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이 연구는 한국인들이 정치적 자유보다는 경제발전을 더 중시하고 있지만, 불평등의 완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경제발전을 우선시하고, 행정부 중심의 권력배분을 선호하는 반면, 자유에 대한 지지성향은 약화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현

재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성향이 강화되는 반면, 비민주적 정치체제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발견에 기초하여, 저자는 한국사회가 사회경제적인 부문으로 민주주의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치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독재 하에서 형성된 경제성장우위의 가치체계와 국가중심적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단적 가치가 아닌 내재적 가치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민주주의체제의 심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핵심어: 민주주의, 자유, 평등, 경제발전, 정부, 이념, 가치체계

I. 서론

민주화에 관한 최근의 연구자들은 민주화 이후 미성숙한 민주주의체제가 공고화되기 위한 정치문화적 조건에 주목해왔다. 이들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유일한 게임(the only game in town)”으로서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정하고, 설

『국가전략』 2013년 제19권 1호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332-2011-1-B00010). 이 논문의 초고는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한국정치 세계학술대회’(2011년 8월)에서 발표되었다. 이 논문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조언을 해주신 김영일 교수님과 류재성 교수님,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문조사를 이용하여 다른 정치체제들에 비해 민주주의체제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정도에 관한 국가간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Linz and Stepan 1996; Rose and Mishler, and Haerpfer 1998; Diamond 1999; Chu, Diamond, and Shin 2001).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체제를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선호를 비교할 때 그 기준이 응답자마다 상이하다면 비교의 결과에 대한 일관된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ose et al. 1998; Diamond 1999; Chu et al. 2001).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현실 민주주의체제의 다양성만큼이나, 시기에 따라 또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다.¹⁾ 서구의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시민의 생존권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발전한 반면, 비서구지역의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인식보다는 빈곤을 탈피하고, 사회적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적 기제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서구의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로서, 비서구지역의 경우 외재적 가치(extrinsic value)로서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적 가치요소들 사이의 충돌은 물론,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의 일관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각 국가들의 이행과정에서 정치엘리트 및 시민들이 얼마나 민주주의적 정치문화를 내면화하였느냐에 따라 궁극적으로 체제 이행의 경로와 공고화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와 지지 수준을 분석하기에 앞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하여 시민들이 부여하는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고 보고, 그 의미의 다양성과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지지성향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쉘보르스키(Przeworski 2010, 7)를 비롯한 여러 민주주의 연구자들을 따라 민주주의를 인민주권, 자유, 평등과 같은 가치들에 기초하여 구성된 “자치정부(self-government)”라고 규정하고,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Korea Democracy Barometer, 이하 KBD) 2010을 이용하여 민주적 정치체제에 기대하는 다양한 가

1) 헤이그와 헤롭(Hague and Harrop 2010, 84)이 지적하듯이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통치자와 피통치자, “양자 사이의 어떠한 분리도 부정”하는 “자치(self-rule)” 혹은 “자치정부(self-government)”를 의미한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갖는 의미는 역사적으로 변화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고찰은 Przeworski (2010)를 참조할 것.

치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²⁾ 특히 이 연구는 자유와 평등을 포함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요소들과 더불어 경제발전 및 정부구성방식(권력분립, 민주적 반응성, 다수제적 정책결정방식)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태도와 이념이 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 연구는 한국인들이 정치적 자유보다는 경제발전을 더 중시하고 있지만, 불평등의 완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경제발전을 우선시하고, 행정부 중심의 권력배분을 선호하는 반면, 자유에 대한 지지성향은 약화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성향이 강화되는 반면, 비민주적 정치체제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발견에 기초하여, 저자는 한국사회가 사회경제적인 부문으로 민주주의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치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독재 하에서 형성된 경제성장 우위의 가치체계와 국가중심적 정책결정과정 등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단적 가치가 아닌 내재적 가치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민주주의체제의 심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정치문화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온 민주화 및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를 평가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정치변동과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주요 가설을 제시할 것이다. IV장에서는 주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설명할 것이며, V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발견들을 요약하고 이들의 함의를 논할 것이다. 이 연구가 민주주의체제를 이해하는 방식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 공고화와 관련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을 발전시키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는 Shin and Lee (2006)과 홈페이지(www.koreabarometer.org)를 참조할 것.

II.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지지

립셋(Lipset 1961)을 비롯하여 근대화론에 기초하여 민주화를 설명해온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민주적 정치문화의 확대 또는 이를 담지하고 있는 중산층의 확대가 민주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체제의 공고화에 기여한다고 믿어왔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시민의 범위가 확장될수록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며, 민주화 이후에도 권위주의체제로의 회귀를 시도하는 정치 엘리트와 이에 대한 항수를 느끼는 시민들이 감소하는 것은 민주주의체제를 공고화시키고 심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Carothers, Thomas 2002). 따라서 이들은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 가능성 혹은 공고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인지능력, 선거 및 비선거적 정치참여와 사회적 신뢰와 같이 민주적 정치문화와 관련된 요인들에 많은 관심을 두어왔다.

제4의 민주화 물결을 주도한 동구지역 국가들이 민주화된 이후 활성화된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관한 상당수의 연구들 역시 민주적 정치문화,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다차원적인 지지와 선호에 주목해왔다: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 선호(preferability), 적합성(suitability), 만족감(satisfaction), 갈망정도(desirability) (Rose et al. 1998; Diamond 1999; Chu et al. 2001; Mishler and Rose 2001). 이들은 주로 서베이 자료에 기초하여 개인 또는 국가수준에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몰입(commitment)’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국가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민주주의체제의 공고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방법은 서구중심적 시각을 벗어나기 힘들며, 결국, 민주주의적 정치문화의 성숙 및 공고화 가능성에 대한 편향된 전망을 유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실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국가들이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수준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대만과 같이 국가건설과 산업화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지원에 의존해온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미국이 상징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지지 수준이 높을 수 있다. 반면, 아랍국가들의 경우, 서구 국가들에 의한 식민지배와 수탈 경험에서 비롯된 반감 때문에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유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수준을 근거로 민주화와 민주주의체제의 공고화 가능성을

전망한다면, 전자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낙관론을, 후자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비관론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국가적 수준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간과한다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수준에 대한 측정결과가 타당성(validity)을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인민주권, 자유, 평등과 같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기본적 가치요소들을 중시하더라도, 세계 자본주의체제를 지배하며 '제국주의적'이며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착취'를 허용하는 서구 국가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들이 대표하는 민주주의체제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폄하하거나, 최소한 적극적인 지지를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요소들을 거부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역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밝힌다고 해서 이러한 가치요소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민주주의는 기원전 5세기에 등장한 개념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나 비로소 보편적인 정당성을 획득한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사르토리(Sartori 1987, 4)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이후로 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 일종의 "경어(honorific word)"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동시에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혼돈이 발생하였다. 비록 다양한 수식어를 붙였지만 사회주의체제는 물론 대부분의 군부권위주의체제의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참칭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노골적으로 민주주의의 의미를 왜곡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이 개념에 대한 상이한 이해방식을 찾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민주주의는 개념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Dahl 1971). 아울러 많은 이들이 지적해온 것처럼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자유, 복지, 사회적 평등과 같이 시민들의 삶의 조건과 관련된 본질적 가치요소의 실현을 동시에 요구한다.³⁾ 물론 이들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상당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

3) 예를 들어, 톨리(Tilly 2007, 14-15)는 포괄적인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는 주민들의 범위(breadth), 평등(equality), 국가의 임의적 행위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국가와 시민 사이의 상호 구속력 있는 협약(mutually binding consultation) 등 네 가지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 일부는 선거에 초점을 두는 절차적 접근법(procedural approach)을 따르지만, 다른 일부는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거나, 공정한 기회 혹은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본질적 접근법(substantive approach)을 따른다(Diamond 1999; Tilly 2007).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다양성은 정치제도적인 차원에서 권력분산과 대의제에 대한 접근법의 차이에서도 발생한다. 일부는 다원주의적 관점에 기초하여 민주정부의 특성을 ‘다수의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권력의 분산에서 찾지만, 다른 이들은 효율적인 다수의 지배를 위해 권력의 집중을 선호한다. 아울러, 일부는 시민들의 합리성과 능력에 대한 자유주의적 가정에 기초하여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의 반응성을 중시하지만, 다른 이들은 시민들이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정보를 알고 있는 국가의 자율적 판단을 더 중시한다(Manin et al. 1999, 10-11).⁴⁾

Ⅲ.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가치요소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서구에서와 달리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을 통해 성취한 자생적 정치체제가 아니라, 해방이후 미군정에 의해서 이식된 외생적 통치체제였으며, 오랜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그 의미가 조작되고 변질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는 서구에서와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인권과 자유, 평등과 같은 내재적 가치보다는 안보 및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외재적 가치, 혹은 수단적 가치(instrumental value)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⁵⁾ 한국의 역대 권위주의 정권들은 예외 없이 자신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체제의 한 형식이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4)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어려운 현대사회에서 “공중에게 최선인 행위”로 정의되는 대의성(representation)은 단순히 “시민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책을 정부가 채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응성(responsiveness)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Pitkin 1967, Manin et al. 1999, 2에서 재인용).

5) 다이아몬드(Diamond 1999, 169-170)는 수단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진정한 지지라고 볼 수 없으며, 내재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졌을 때 민주주의가 공고화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그는 립셋(1961)의 주장을 빌어 민주적 정당성이 일단 깊게 내면화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다.

과 경제적 저발전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치체제라고 역설해왔다(최장집 1993; 1996). 소위 ‘한국식 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이들의 지배 하에서 민주주의는 반공과 경제성장에 종속된 대중동원의 기제였던 것이다(최장집 1993).⁶⁾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북한과의 대치상황과 국제적인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형성된 이러한 가치체계가 유지 혹은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Woo-Cumings 1998; Cho 1998; Peng & Wong 2008).

둘째, 한국에서 평등에 대한 가치지향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대립하거나 최소한 우선성을 부여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 한국전쟁 이후 권위주의 체제가 동원한 강력한 반공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가치체계에서 평등에 대한 지향이 억제되어 왔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주의를 정치적 영역에 한정시키는 자유주의적이며, 보수적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최장집 1993; 2007). 박찬표(2007, 226)가 지적하였듯이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미군정에 의해서 “새로운 국가의 이념”으로 도입된 “냉전자유주의”이며, 민주화 이후에도 자유주의는 “자유, 자본, 시장”을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기득권층을 방어하는 논리”로 전유되어왔다(pp. 219-220).⁷⁾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영역을 확장해야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평등은 민주주의의 가치체계 외부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손호철 1997).

셋째, 한국인들은 장기간 지속되어온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의 영향으로 행정부 중심의 정부구조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정부이냐”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관련된 이익대표성의 문제를 포함한다. 라이프르트(Lijphart 1999, 1)가 지적했듯이, “정부가 누구의 이익에 반응해야하는가”라는

6) 최장집(1993, 205)은 해방 이후 민주화 이전 시기까지 정치적 실제와의 상당한 “괴리”에도 불구하고 역대 권위주의 정권들이 지속적으로 반공주의의 상위개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해왔다고 주장한다.

7) 박찬표(2007, 206)는 자유주의자들이 “경제적 의제를 정치적 결정의 대상에서, 즉 민주주의 영역에서 배제하고자”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는 민주주의가 “의사결정의 한 ‘방식’일 뿐이며, “결과’와 그 ‘내용’이 열려”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의 ‘범위’는 변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적 가치에 한정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p. 226). 보수주의적 시각을 따르는 김세중(2011) 또한 해방 이후 반공주의에 의해 보수주의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이들 사이의 관계가 전도되었다고 주장한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인민의 다수(majority of the people)” 혹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as many as possible)”이냐에 따라 다수제 모델(majoritarian model)과 합의제 모델(consensus model) 등 상이한 정부유형을 취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한국의 정부구조는 제왕적 수준의 강력한 대통령제를 비롯하여, 단순다수제에 주로 의존하는 공직선출제도, 단원제, 비연방제, 중앙은행의 취약한 독립성, 지방정부의 낮은 자율성 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권력의 공유를 허용하는 합의제적 방식보다 권력을 집중시키는 다수제 모델에 가깝다. 다수제적 민주주의는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의 선호에 반하는 소수의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화 이후에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나친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삼권분립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다수만의 이익이 아니라 소수를 포함한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규범적으로 우월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면서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합의제가 다수제보다 국민들로부터 더 선호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넷째, 한국인들은 정부-시민 사이의 관계에서 민주적 반응성(responsiveness)보다 국가의 자율성(state autonomy)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민주화 이후 과거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국가의 독단적인 정책결정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성장하면서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정부가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적 반응성에 대한 요구가 성장해온 것이 사실이다(Dahl 1971; Manin et al. 1999; Gilens 2005).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이익집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소위 대중영합주의적인 정책결정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는 점에서, 민주적 반응성보다 국가의 책임성이 여전히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가능성 또한 있다.⁸⁾

다섯째,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민주주의를 지지할 가능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990년을 전후로 한국의 진보세력은 소련과 동구 공산주의체제의 몰락을 경험하면서 급속히 체제 내화되었으며, 지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진보세력들이 이제는 시장체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용한 것으로

8) 민주적 책임성은 단기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기보다 일반의지(general will)의 담지자로서 국가 혹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집행하는 자율성에 무게를 둔다.

보인다. 더 이상 '사유재산의 폐지'나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같은 급진적 주장을 이들의 정치강령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노동계급의 착취를 통해 재생산되는 시장경제체제와 '부르주아지'의 계급독재에 불과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안적 정치체제를 추구할 가능성 또한 있다. 따라서 이들은 보수적인 시민들에 비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신도철과 지병근(Shin & Jhee 2005, 390-391)은 1999년 KBD를 분석하여 한국에서 이념적으로 진보적 시민들일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수준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개혁에 대하여 진보성향의 시민들이 낮은 수준의 지지를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의 진보적 시민들이 서구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다르게 자유나 경쟁을 수용하지 않는 레닌주의적 인식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자들 역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그것의 정치적 형식인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하여 비판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들의 조사가 이루어진 10여년 전에 비하여 현격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겪었던 한국인들의 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IV. 연구 디자인

이 연구는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경 수집된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Korea Democracy Barometer 2010) 여론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여론조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들과 함께 권력구조, 민주적 반응성, 이익대표방식을 포함하는 정부구성의 원칙들과 자유, 경제발전, 불평등 완화와 같은 한국사회의 주요 가치요소들과 관련한 응답자들의 태도를 묻는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부록 1 참조). 이 질문들은 각각 앞서 언급했던 주요 가설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활용되었다.

먼저, 이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따라 한국의 과거·현재·미래의 민주주의 체제,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만족도, 적합성 등 다차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응답자가 생각하는 “현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5년

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몇 점 정도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1~10: 완전독재=1, 완전민주주의=10),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매우 불만=1, 매우 만족=10),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부적합=1, 완전 적합=10)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각각 이용하였다. 아울러 시공간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 선호를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어느 정치체제” 혹은 “독재체제”에 비해서 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좋다” 혹은 “항상 더 낫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민주주의 선호=1, 비선호=0)을 각각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비민주적 정치체제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기 위하여 군부, 강력한 지도자, 일당에 의한 통치체제 등을 채택하면 “우리나라가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동의=1, 반대=0)과 이들을 합산한 비민주적 정치체제 선호지수(0~3)를 이용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는 정부구성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행정부 중심의 정부구조, 민주적 반응성, 다수의 이익실현 추구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측정하였다. 먼저, 행정부 중심의 권력구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1) 사법부가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야한다거나 2) 국회의 감시가 정부의 업무 효율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여부(반대=1, 동의=0)를 묻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를 합산하여 만든 권력분립지수(0~2)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민주적 반응성과 이익대표방식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부 지도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야하는지(민주적 반응성=1) 아니면 “국민에게 최선인 것”을 시행해야 하는지(민주적 반응성=0)와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국민 다수가 선호하는 것”을 따라야 하는지(다수의 이익대표=1) 아니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따라야 하는지(다수의 이익대표=0)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요소들인 ‘정치적 자유’, ‘평등’의 가치 우선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1)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는 것”(경제발전=1)과 “선거를 통해서 정부지도자를 선출하는 것”(경제발전=0), 2) “빈부차이를 줄이는 것”(불평등 완화 혹은 평등=1)과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불평등 완화 혹은 평등=0)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용하였다. 아울러, 자유에 대한 선호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3) 집회와 시위의 허용,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등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얼마나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필

수=1, 필수 아님=0)과 이들을 합산하여 만든 ‘자유’ 지수(0~3)를 활용하였다.

이념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요소들과 정부구성방식에 대한 태도,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응답자 자신의 이념적 위치를 이용하여 측정된 이념변수(진보=1~보수=10)와 앞서 언급했던 여러 변수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카이제곱검정과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모델에는 독립변수로 이념과 함께 자유, 경제발전, 평등, 권력분립, 민주적 반응성, 다수의 이익추구 등이 포함되었으며, 종속변수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1~3: 저=1, 중=2, 고=3),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 선호(과거대비, 독재대비), 비민주적 정치체제 선호지수를 사용하였다.⁹⁾ 각 모델에는 종속변수의 특성에 조응하는 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갈망’ 모델과 ‘비민주적 정치체제’ 모델에는 서열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이, ‘민주주의 선호’ 모델에는 로지스틱 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각 모델에는 통제변수로 소득과 학력(초등 이하=1, 중등=2, 고등=3, 전문대=4, 4년제 대학 이상=5), 연령, 성별(남성=1, 여성=0)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소득변수는 응답자 가정의 월 평균 가계소득(상여금, 연금, 임대소득, 이자소득, 생활보조금 등을 포함한 세전액)을 사용하여 5단계(200만원 미만=1;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3;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4; 500만원 이상=5)로 구분하였다.

9) 이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민주주의 선호(과거 및 독재 대비), 비민주적 정치체제 선호, 세 가지 자유관련 변수들은 이항변수로,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삼항변수(저, 중, 고)로 재코딩 하였다.

V. 분석 결과

1. 민주주의의 주요 가치요소들과 정부구성방식에 대한 태도

아래의 표 1은 KDB 2010 여론조사를 이용하여 주요 가치요소들과 민주정부의 구성방식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각각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가치요소들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은, 첫째,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시민들의 다양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82.1퍼센트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언론기관이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78.9퍼센트가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다만,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과 54.4퍼센트만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둘째, 한국인들은 정치보다 경제와 관련한 가치들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81.3퍼센트의 응답자가 정치적 자유보다 빈부격차의 해소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선거민주주의, 즉 “선거를 통해서 정부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보다 “국민을 좀 더 잘 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74.2퍼센트에 달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⁰⁾ 이는 무엇보다,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 이후 이미 획득한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관심의 약화 혹은 만족감이 반영된 것이며, 이제 정치영역을 넘어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심화하려는 시민들의 욕구가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¹⁾

셋째, 국부창출 혹은 경제발전에 우선성을 두는 이들보다 빈부격차 완화, 즉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에 우선성을 두는 이들의 비율이 더 높았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비록 그 차이가 7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주도의

10) 이 표에는 생략되었지만, ‘경제발전’과 ‘민주화’ 가운데 전자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48.9%) 또한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들(16.7%)보다 세 배 가까이 더 많았다. 양자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34.4퍼센트를 차지하였다.

11)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심각한 정치적 자유의 훼손이 이루어졌으며, 촛불시위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로 정부정책에 저항하는 대규모 정치적 행동이 분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치적 자유보다 경제발전 및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earson 상관계수 = .14).

〈표 1〉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와 정치제도구성의 원칙에 대한 태도

주요 가치요소 및 원칙	세부 요소	긍정적 태도
I 핵심적 가치		
1. 자유	집회와 시위	54.4
	표현	82.1
	언론	78.9
2. 경제발전	부의 창출(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것)	74.2
	선거민주주의(자유롭고 경쟁하는 선거)	25.8
3. 평등	불평등 완화(빈부격차 감소)	81.3
	정치적 자유	18.7
II 정부구성		
1. 권력구조	사법부 견제	74.2
	입법부 견제	58.8
2. 이익대표	다수의 이익	36.4
	전체의 이익	63.6
3. 민주적 반응성	반응성	41.2
	책임성	58.8

자료출처: KDB 2010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우위의 가치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던 한국사회에서 더 많은 응답자들이 불평등의 해소를 중시한 것은 상당한 가치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심화되어가는 사회적 양극화를 막도하면서 소위 ‘굶餓이 복지국가(welfare state laggard)’의 문제점에 대한 한국인들의 자각이 분배정책을 경제성장정책에 종속시켜온 가치체계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Peng & Wong 2008).

넷째, 정부의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미국식의 삼권분립에 대한 한국인들의 동의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기능에 대한 지지 수준은 비교적 높았다. “판사들은 중요한 판결을 내릴 때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74.2퍼센트의 응답자가 (약간 혹은 매우)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행정부 견제에 대한 지지수준은 이보다 훨씬 낮았다. “국회가 정부를 끊임없이 감시하면 정부는 중요한 일을 해낼 수가 없다”는 의견에 겨우 58.8퍼센트의 응답자들만이 (약간 혹은 매우)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법부에 비해서 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신뢰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한국인들은 민주적 반응성보다 정부의 책임성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에게 최선”인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의 책임성을 중시하는 이들의 비율은 58.8퍼센트였으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민주적 반응성을 중시하는 이들보다 약 17퍼센트 정도 더 많았다. 이는 한국사회의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이익집단들 사이의 갈등, 포퓰리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정부주도의 고도경제성장에 대한 향수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은 이익대표방식으로 다수제적인 이익실현방식보다 공동체적인 이익실현방식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다수가 선호하는 것”을 따르기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보는 이들은 63.6퍼센트에 이르렀다. 이는 한국사회의 공동체적이며, 집단주의적 정치성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아래의 표 2는 한국에서 과거, 현재, 5년 후 희망하는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평가와 기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satisfaction) 등 현실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도(desirability), 적합성(suitability) 등을 보여준다. 이 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첫째, 이명박 정부하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잘 나타나듯이 2010년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평가는 평균 5.9에 불과하며, 과반수의 응답자(60.5%)들이 1점(완전독재)~10점(완전민주주의) 가운데 6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현재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 역시 이와 유사하게 평균 점수는 5.6에 불과하였으며, 55.3퍼센트의 응답자들이 6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는 평균 점수가 7.2였으며, 6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응답자의 비율이 30.6퍼센트에 불과한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의 민주주의 수준에 한참 뒤쳐진 것이다.

둘째, 미래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추정은 비교적 낙관적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갈망수준은 평균 8.1로, 11.0퍼센트의 응답자들만이 6점 이하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나머지 절대다수의 응답자들은 7점 이상의 민주주의를 희망한다고 답하였다. 5년 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추정하면서 대부분의 응답자들(71.5%)이 7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였다(평균 7.4). 이러한

〈표 2〉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민주주의 수준	과거 (노무현 정부)	현재 (이명박정부)	만족도	5년 후	적합성	갈망도
1-5	17.7	39.9	33.1	11.8	15.8	6.4
6	12.9	20.6	22.3	10.6	13.4	4.6
7-10	68.8	38.5	26.5	71.5	68.6	87.6
모름/무응답	0.7	1.1	18.2	6.3	2.4	1.4
평균	7.2	5.9	5.6	7.4	7.0	8.1

자료출처: KDB 2010

성향은 비록 이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에서 민주주의체제가 “과거 어느 정치체제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다”는 의견에 긍정적으로 답한 이들의 비율이 71.0퍼센트에 달하였다는 점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형태의 정부보다 항상 더 낫다”라고 응답한 이들 역시 70.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적합성의 평균점수는 7.0이었으며, 29.2퍼센트의 응답자가 6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3. 이념적 성향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1) 이념적 성향과 민주주의의 주요가치요소와 정부구성에 대한 태도

민주주의의 주요가치요소와 정부구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선호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3은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이념에 따라 자유, 경제성장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 권력분산, 민주적 반응성과 다수의 이익추구 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과이다.¹²⁾

이 표에서 잘 나타나듯이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단순 합산하여 만든 자유에 대한 지지수준(평균=2.1, 표준편차 0.9)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거민주주의보다 경제성장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최장집(1993)이 지적

12) 진보와 보수의 개념에 관한 논의는 지병근(2009)을 참조할 것.

〈표 3〉 이념과 민주주의의 가치요소, 정부구성방식, 체제선호와 지지

	가치 우선성							
	자유*				경제발전**		불평등 완화	
	최저(0)	중저(1)	중(2)	고(3)	비선호	선호	비선호	선호
진보(1~4)	5.2	18.6	30.9	45.3	32.9	67.1	22.6	77.4
중도(5~6)	4.1	15.7	39.8	40.5	25.1	74.9	16.6	83.4
보수(7~10)	7.8	19.9	39.8	32.4	18.8	81.2	17.3	82.7
		chi2(6)=16.30 Pr=0.012			chi2(2)=14.45 Pr=0.001		chi2(2)=4.41 Pr=0.110	
	정부구성							
	권력분립**			반응성		다수의 이익		
	저(0)	중(1)	고(2)	비선호	선호	비선호	선호	
진보(1~4)	17.9	29.6	52.4	53.3	46.7	60.7	39.3	
중도(5~6)	18.8	35.2	46.0	60.2	39.8	63.7	36.3	
보수(7~10)	17.6	48.8	33.6	62.7	37.4	64.4	35.6	
		chi2(4)=25.97 Pr=0.000		chi2(2)=5.62 Pr=0.060		chi2(2)=0.97 Pr=0.615		

* 유의도 .05, ** 유의도 .01
자료출처: KDB 2010

한 것처럼 민주주의보다 경제성장을 상위의 가치로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평등의 완화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이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이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온 한국사회에서 이념적 차이와는 무관하게 빈부격차의 해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부구성과 관련하여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권력 분립, 민주적 반응성, 다수의 이익을 대표해야한다고 사고하는 경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무엇보다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들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경험했던, 대통령-행정부 중심의 권력구조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다수결의 원리에 대한 선호가 강한 반면, 보수적 성향의 시민들은 중우정치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정책결정과정에

13) 이는 대중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진보-보수 사이의 이념적 갈등이 분배문제보다는 경제성장 문제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서 정부의 책임과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태도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력분립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수들과 이념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2) 이념적 성향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아래의 표 4는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이념적으로 상이한 성향의 집단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과거 및 비민주적 정치체제 대비) 민주주의체제와 비민주적 정치체제에 대한 선호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 가운데 하나는 이념이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념적 보수성이 과거의 정치체제와 비교하여 현재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그러나 독재체제와 비교하여 민주주의체제를 선호하는 이들이 차지

〈표 4〉 이념과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태도

	민주주의 지지						
	민주주의 갈망			민주주의 선호** (과거대비)		민주주의 선호* (독재대비)	
	저(1~7)	중(8)	고(9~10)	비선호(0)	선호(1)	비선호(0)	선호(1)
진보(1~4)	24.8	33.7	41.6	33.7	66.3	16.8	83.2
중도(5~6)	26.5	32.3	41.3	31.5	68.5	23.6	76.4
보수(7~10)	23.8	43.0	33.2	19.7	80.4	27.7	72.4
	chi2(4)=9.21 Pr=0.056			chi2(2)=13.88 Pr=0.001		chi2(2)=8.54 Pr=0.014	
	비민주적 체제 선호						
	군부체제		강력한 지도자**		일당체제*		
	비선호(0)	선호(1)	비선호(0)	선호(1)	비선호(0)	선호(1)	
진보(1~4)	93.7	6.4	90.4	9.6	93.7	6.4	
중도(5~6)	90.7	9.3	91.9	8.1	93.6	6.4	
보수(7~10)	89.1	10.9	84.2	15.8	88.2	11.8	
	chi2(2)=3.75 Pr=0.153		chi2(2)=9.97 Pr=0.007		chi2(2)=7.39 Pr=0.025		

* 유의도 .05, ** 유의도 .01

자료출처: KDB 2010

14) 진보적 응답자들은 보수적 응답자들보다 현실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의 민주주의체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비중은 오히려 보수적일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응답자들이 보수적일수록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과거 어느 정치체제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다”고 여기는 경향은 강화되지만, “다른 어떤 형태의 정부보다 항상 더 낫다”고 여기는 이들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독재정치가 더 낫다”거나 “나 같은 사람에게는 민주 정부나 독재 정부나 상관없다”고 여기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보수적인 이념성향과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사이의 부적관계는 이념적 성향에 따른 비민주적 정치체제(군부, 강력한 지도자, 일당체제)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더욱 확연히 나타난다.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군대가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 “국회나 선거제도를 없애고 강력한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 혹은 “정당 하나만 선거에 참여시키고 국정을 맡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는 이들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결정 요인 I

변수	민주주의 갈망	민주주의(과거대비)	민주주의(독재대비)	비민주체제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이념	-0.04 (1.08)	0.13 (3.23)**	-0.11 (2.42)*	0.15 (3.15)**
수입	0.01 (0.09)	0.10 (1.48)	-0.03 (0.42)	-0.04 (0.58)
교육수준	0.04 (0.65)	-0.10 (1.12)	0.14 (1.45)	-0.10 (1.06)
연령	0.00 (0.09)	0.00 (0.25)	0.00 (0.45)	0.00 (0.31)
남성	-0.06 (0.45)	0.01 (0.08)	0.04 (0.23)	0.23 (1.29)
상수		0.18 (0.31)	1.28 (2.01)*	
관측치	952	872	820	964

* 유의도 .05, ** 유의도 .01
자료출처: KDB 2010

15) 일관되게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응답자들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69.9퍼센트였으며, 때로는 독재체제가 더 낫다거나 상관없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각각 9.6퍼센트와 20.6퍼센트였다.

위의 표 5는 수입, 교육수준, 연령,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념이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지지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회귀분석한 결과이다.¹⁶⁾ 이 표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이념은 모델 1을 제외한 모든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념이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현재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과거 어느 정치체제'보다 낫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증가하지만, 독재체제와 비교하여 민주주의체제를 선호할 가능성은 감소하며, 군, 강력한 지도자, 혹은 단일정당에 의한 비민주적 통치를 선호할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통제변수들은 종속변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6은 민주주의의 주요가치요소들과 정부구성방식에 대한 태도가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지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비록 일관성은 없지만 일부 모델에서, 자유, 평등, 삼권분립 등의 민주주의의 주요 가치요소들과 정부구성방식에 대한 태도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5). 모델 1~2에서 민주적 반응성과 다수의 이익실현추구와 같은 변수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반응성이 높거나 다수결의 원리를 중시하는 이들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⁷⁾ 권력분립에 대한 태도와 민주주의의 가치요소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경제발전을 중시할수록, 그리고 권력분립에 대한 가치부여를 하지 않을수록 '과거' 대비 '현재'의 민주주의체제에 대하여 긍정

16) 종속변수의 성격에 따라 모델 1과 모델 4는 서열회귀분석을, 모델 2와 모델 3은 로지스틱 모델을 이용하였다. 이미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모델 4의 종속변수인 비민주체제에 대한 선호는 군, 강력한 지도자, 단일정당에 의한 통치에 대한 선호를 이항변수(선호=1, 비선호=0)로 재코딩한 이후 단순합산하여 만든 것이다(0~3).

17) 이러한 분석결과는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측정하는 방법과 공중다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유발하는 모델구성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종속변수를 10점(1-10) 척도로 측정하거나, 이념을 3점(진보, 중도, 보수) 척도로 측정하거나, 통제변수 이외의 독립변수들을 하나씩 포함한 모델을 이용하더라도 분석결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표 6〉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결정 요인 II

	민주주의 갈망		민주주의(과거대비)		민주주의(독재대비)		비민주체제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모델 8
자유	0.08 (1.05)		-0.08 (0.83)		-0.02 (0.21)		-0.57 (5.89)**	
경제발전	-0.18 (1.20)		0.51 (2.87)**		-0.34 (1.59)		0.02 (0.09)	
평등	0.01 (0.04)		-0.25 (1.22)		-0.33 (1.35)		-0.48 (2.14)*	
권력분립		-0.02 (0.40)		-0.15 (2.90)**		0.08 (1.48)		-0.23 (4.33)**
반응성		-0.35 (2.76)**		-0.31 (1.95)		0.70 (3.70)**		-0.12 (0.65)
다수의 이익추구		-0.35 (2.75)**		0.22 (1.36)		0.06 (0.32)		0.23 (1.27)
이념	-0.02 (0.72)	-0.04 (1.28)	0.12 (2.72)**	0.11 (2.46)*	-0.10 (2.22)*	-0.08 (1.72)	0.12 (2.52)*	0.11 (2.25)*
수입	0.03 (0.48)	0.01 (0.25)	0.09 (1.38)	0.11 (1.61)	-0.04 (0.56)	-0.03 (0.35)	-0.06 (0.72)	-0.04 (0.46)
교육수준	0.03 (0.42)	0.04 (0.62)	-0.09 (1.01)	-0.06 (0.72)	0.13 (1.28)	0.14 (1.43)	-0.08 (0.73)	-0.10 (1.01)
연령	0.00 (0.07)	0.00 (0.09)	0.00 (0.08)	0.00 (0.59)	0.00 (0.28)	0.00 (0.05)	0.00 (0.18)	0.00 (0.21)
남성	-0.08 (0.60)	-0.07 (0.53)	0.07 (0.41)	-0.01 (0.08)	0.03 (0.17)	-0.02 (0.10)	0.23 (1.25)	0.27 (1.48)
상수			0.29 (0.44)	0.98 (1.54)	1.95 (2.66)**	0.54 (0.76)		
관측치	914	925	838	855	793	799	924	937

* 유의도 .05, ** 유의도 .01
 자료출처: KDB 2010

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 반응성과 다수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밝힌 것처럼 경제발전을 중시하고 권력집중을 선호하는 이들일수록 보수적이며, 이들은 현정부하의 민주주의체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모델 5~6에서는 반응성만이 독재체제보다 민주주의체제가 더 낫다는 평가를 촉진하는 반면, 민주주의의 가치요소들과 정부구성방식과 관련한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요소들과 정부구성방식에 대한 인식은 비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선호에 가장 현격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7~8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선호가 강할수록 군, 강력한 지도자, 혹은 일당체제에 의한 통치방식을 대안으로 여기는 성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와 입법부의 종속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 역시 권위주의적 체제대안에 대한 선호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발전 혹은 반응성이나 다수제에 대한 선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지금까지 이 연구는 KBD 2010을 이용하여 핵심적 가치요소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과 이에 이념적 성향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한 발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심화시켜야 한다는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시기의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는 상당히 낮았다. 둘째, 한국인들은 정치적 자유에 비해서 경제성장과 함께 불평등의 완화를 중시한다. 셋째, 사법부와 국회의 행정부 견제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다수만이 아닌 전체의 이익을 반영해야하며, 단순히 국민의 요구를 따르기보다는 그들에게 최선인 정책을 실행해야한다는 공동체와 국가중심의 정책결정과정을 선호한다.

넷째,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선거민주주의보다 경제성장을 중시하고, 자유에 대한 선호가 약할 뿐만 아니라, 권력분립에 부정적이며, 민주적 반응성보다 정부의 책임성을 더 중시한다. 아울러,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현재의 민주주의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권위주의 체제를 대안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선호는 비민주적 정치체제에 대한 선호를 약화시키며,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성향은 현재의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촉진한

다. 권력분립에 대한 선호는 '현재'의 민주주의체제와 비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선호를 약화시키는 반면, 반응성에 대한 선호는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선호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무엇보다 한국인의 가치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태도가 이념적 성향과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요소 및 정부구성방식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가치요소들 가운데 무엇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지지와 비민주적 체제에 대한 태도는 현격히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처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수준에 초점을 두고 민주화와 민주주의 공고화 가능성을 평가하기에 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부여하는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발견은 민주주의체제의 공고화와 심화발전을 위해 민주주의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체계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함을 제기한다. 물론 불평등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심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또한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장기간의 개발독재 하에서 이미 한국인에게 내면화된 경제성장우위의 가치체계와 행정부 중심의 권력구조 및 국가의존적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선호 또한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이러한 경향성이 강화되기도 한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처럼 민주주의에 대하여 도구적 가치를 부여하는데 머무른다면 정치문화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심화시키는 것은 요원할 것이다.

◇ 투 고 일 : 2013. 1. 14.

◇ 심사완료 : 2013. 2. 21.

◇ 계 재 일 : 2013. 2. 28.

[부록]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Korea Barometer Survey) 2010의 주요 질문항

주요 변수	질문항	코딩
권력분립	판사들은 중요한 판결을 내릴 때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가 정부를 끊임없이 감시하면 정부는 중요한 일을 해낼 수가 없다 (4점 척도)	동의=0, 반대=1
민주적 반응성	정부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국민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1, 국민에게 최선=0
다수의 이익추구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는 '국민 다수가 선호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수=1, 국민전체=0
경제발전 I	'국민을 좀 더 잘 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유롭게 경쟁하는 선거를 통해서 정부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발전=1, 자유경쟁선거=0
경제발전 II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두 가지 국가 목표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다; 2) 민주화가 더 중요하다; 3) 똑같이 중요하다	경제발전=1, 나머지=0
평등	'빈부차이를 줄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부격차해소=1, 정치적 자유=0
민주주의		
갈망	'현재 우리나라가 몇 점 정도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 독재=1, 완전 민주=10
만족도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불만족=1, 매우 만족=10
적합성	현재 민주주의가 우리나라 실정에 얼마나 적합한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다음 보기의 점수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적합=1, 적합=10
독재대비 선호	정치체제에 관한 다음 견해 중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1)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형태의 정부보다 항상 더 낫다; 2) 상황에 따라서는 독재정치가 더 낫다; 3) 나 같은 사람에게는 민주 정부나 독재 정부나 상관없다	민주주의=1, 나머지=0
과거대비 선호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과거 어느 정치체제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4점 척도)	동의=1, 반대=0
비민주주의 선호	다음의 각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군대가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 ㉡국회와 선거제도를 없애고 강력한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 ㉢정당 하나만 선거에 참여시키고 국정을 맡도록 해야 한다 (4점 척도)	동의=1, 반대=0

출처: Korea Barometer Survey 2010

참고문헌

- 김세중. 2011. “박정희 시대 산업화 보수주의와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미래』, pp. 41-74. 안병직 편. 서울: 시대정신.
- 손호철. 1997. “한국 민주화: 이론적 쟁점.” 『현대 한국정치 : 이론과 역사』, pp. 375-400. 서울: 사회평론.
- 지병근. 2008. “민주주의 이행: 민주화이론의 한국적 수용.”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비교정치이론과 한국적수용』. 서울: 법문사.
- 지병근. 2009. “한국에서의 이념적 선호: 진보-보수 개념의 의미와 측정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세계학술대회(2009. 08. 20).
- 최장집. 1993.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서울: 한길사.
- 최장집. 1996.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나남.
- 박찬표. 2007. “범치 민주주의 대 정치적 민주주의.” 최장집·박찬표·박상훈 저. 『어떤 민주주의인가: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하나의 시각』. pp. 197-229. 서울: 후마니타스.
- Carothers, Thomas. 2002. “The End of the Transition Paradigm.” *Journal of Democracy* 13, No. 1. pp. 5-21.
- Chu, Yun-han, Larry Diamond, and Doh Chull, Shin. 2001. “Halting Progress in Korean and Taiwan.” *Journal of Democracy* 12, No. 1. pp. 122-136.
- Dahl, Robert. 1971.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Yale University Press.
- Diamond, Larry. 1999. *Developing Democracy: toward consolid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Gilens, Martin. 2005. “Inequality and Democratic Responsiveness.” *Public Opinion Quarterly* 69, No. 5. pp. 778-796.
- Hague, Rod and Martin Harrop. 2010.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An Introduction* (8th edition). New York: Palgrave-MacMillan.
- Huntington, Samuel.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klahoma Press.
- Korea Democracy Barometer. <http://www.koreabarometer.org>.

- Shin, Doh Chull and Jaechul Lee. 2006. "The Korea Democracy Barometer Surveys: Unraveling the Cultural and Institutional Dynamics of Democratization, 1997-2004." *Korea Observer* 37(2): 237-275.
- Lijphart, Arend. 1999.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Yale University Press.
- Linz, Juan J. & Alfred Stepan. 1996. "Toward Consolidated Democracies." *Journal of Democracy* 7, No. 2. pp. 14-33.
- Lipset, S. M. 1961.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ishler, William and Richard Rose. 2001. "Political Support for Incomplete Democracies: Realist vs. Idealist Theories and Measure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 No. 4. pp. 303-320.
- Peng, Ito and Joseph Wong. 2008. "Institutions and Institutional Purpose: Continuity and Change in East Asian Social Policy." *Politics & Society* 36, No. 1. pp. 61-88.
- Przeworski, Adam. 2010. *Democracy and the Limits of Self-Govern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zeworski, Adam, Susan C. Stokes, and Bernard Manin. 1999. *Democracy, Accountability, and Represent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26.
- Rose, Richard and Doh Chull shin. 2001. Democratization Backwards: The Problem of Third-Wave Democraci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 331-354.
- Rose, Richard, William Mishler, & Chritian Haerpfer. 1998. *Democracy and Its Alternatives: Understanding Post-Communist Societie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artori, Giovanni. 1987. *The Theory of Democracy Revisited*. New Jersey: Chatham House Publisher.
- Shin, Doh Chull. and Byong-Kuen Jhee. 2005. "How Does Democratic Regime Change Affect Mass Political Ideology? A Case Study of South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6, No. 4. pp. 381-396.
- Tilly, Charles. 2007.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arda, Howard J. 2002. *Comparative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Harcourt

College Publishers.

Woo-Cumings, Meredith.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in East Asia: Perspective on the State, Market, and Ideology." In Masahiko Aoki & Hyung-ki Kim, and Masahiro Okuno-Fukiwara eds.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323-341.